

#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현황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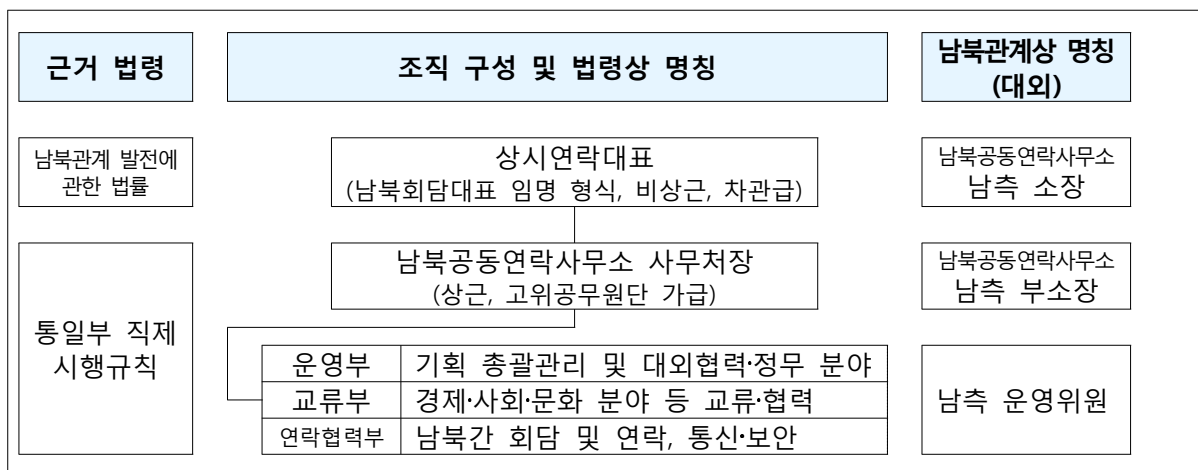
김 철 희(한반도신경제센터, saveafrica@kdb.co.kr)

- ◆ 남북은 당국간 교섭과 회담, 민간교류 지원 등을 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·운영함으로써 '24시간 365일' 상시 소통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
- ◆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설로 남북간 교류협력의 양적·질적 성장이 기대되며,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한 유관 공공기관의 직원 파견 등 공동연락사무소 확대 방안의 마련이 필요

## □ 남북은 9.14일 「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·운영에 관한 합의서」에 서명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 건물에 개소·운영 중

- 남북은 4.27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「판문점선언」을 통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(이하 “연락사무소”)의 개성지역 설치에 합의
  - 연락사무소 설치로 남북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여 남북간 신뢰 및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도모
- 연락사무소는 법적 근거인 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과 남북간 체결한 「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·운영에 관한 합의서」에 따라 설치·운영

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조직 구성도



자료 : “남북연락사무소 14일 개소...초대 소장에 전해성차관”, 노컷뉴스(18.9.12일)를 참고하여 재정리

- 연락사무소 운영조직인 운영부, 교류부, 연락협력부는 통일부와 유관부처에서 파견된 총 30명(정원)의 인원으로 구성
- 연락사무소는 상시 운영체제 하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, 양측은 차관급 소장이 주재하는 주1회 정례회의를 열어 주요 사안을 논의

- 남북은 연락사무소 개설로 남북간 분과회담, 실무회담, 공동행사 개최 등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'24시간 365일 상시 소통체계'를 구축
  - 최근 10.4 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하여 산림협력분과회담, 체육분과회담, 보건의료 분과회담, 항공실무회담, 통신실무회담 등을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진행
  - 연락사무소 설치 이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한 남북간 직통전화 또는 팩스로 연락하던 방식에서 상시 대화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남북관계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
**□ 연락사무소의 개설로 상시적 남북접촉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과 남북간 교류범위 확대 및 활성화 등 남북간 교류협력이 양적·질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**

- 개소 초기 남북 당국간 각종 교섭 및 회담 준비 등에 집중되었던 연락사무소의 업무가 향후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민간분야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·발전될 것으로 전망
- 과거 중국 동북3성,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주선을 통해 이루어지던 남북간 민간교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소요 비용·시간, 교류의 연속성 보장, 보안 등의 문제가 연락사무소 개설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**□ 남북간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지원과 협력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확대 방안 마련 필요**

- 향후 남북관계 및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하여 연락사무소를 '서울-평양 상호대표부'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
  - 우리 정부는 향후 연락사무소를 상호대표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
    - \* 독일의 경우 통일 전 서독의 본과 동독의 베를린에 상호대표부를 설치하여 외교적 현안을 절충하였고, 중국과 대만도 2010년 각각 해협양안관광여유협회(베이징), 해협양안여유교류협회(타이베이)를 설치해 양안관계의 개선을 도모
- 연락사무소 확대 방안의 경과조치로, 민간분야의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간 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인력의 연락사무소 상주근무 추진 필요
  - 남북경협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성공단 재개와 철도·도로 연결 등 북한 인프라사업 추진을 준비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실무적인 수요 증가 예상

- 남북간 경제협력 지원을 위해 다양한 관련분야의 공공기관 파견직원이 상주하며 민간부문 경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했던 과거의 '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' 사례 참고 필요

**(참고)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(2005년 10월 개설) 사례**

- 남북은 2005년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의 전신으로 평가받는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를 개설하여 경제분야 교류협력을 상시적으로 협의
  -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일시 폐쇄하였다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선언 직후 다시 폐쇄
- **(목적)** 남북 경제협력사업 도모, 경제거래(직접거래 방식) 확대
- **(지위)** 남북사이의 경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쌍방의 연락, 지원 및 협의 보장기관
- **(구성)** 남북의 당국에서 파견하는 국장급 소장을 포함하는 적정 인원
  - 우리 정부부처 정원은 7명으로 하고, 중소기업진흥공단, KOTRA, 무역협회,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등 총 15명 내외 상주 근무
  -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(민경련) 등에서 파견된 10여명 상주 근무
- **(주요 업무)** 투자상담, 투자 관련 자료 제공 등 경제교류협력 관련 업무